

# 총선공약, 지켜야 한다



장원석 교수  
(단국대 농경제학과)

지난 반세기동안 정치인들의 공약(公約)은 빈말(公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지켜져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되면, 경제·문화등 모든 부문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받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치는 경제·사회·문화를 제어하기도, 또는 창조하기도 하는 힘을 갖기 때문에 필요악이다. 따라서 정치판이 좀 더 국민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만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우리는 정당의 정책공약에 관심을 갖게된다.

그동안 정책공약 비교평가를 담당해온 필자는 이번 15대 총선에 대한 평가작업을 시행하였는 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총괄적으로 볼때, 4대 정당은 공히 학계와 시민단체(경실련), 농민단체가 제안한 사항까지 공약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일부는 실현성이 없는 것을 공약으로 남발한 감이 있다. 특히 유감스러운 일은 여성농어업에 대한 정책을 모두 누락시킨 점이다.

그런 중에도 다행인 것은 그동안 즐기치게 주장되어온 직접 지불제도를 4개 정당이 모두 공약으로 발표한 점이다.

각론적으로는 지면관계로 3대정당의 농어촌공약에 대해서만 간략히 언급기로 한다. 이를통해 3대정당은 자신들이 약속한 농어촌공약을 성실히 이행함은 물론 상대방의 좋은 공약도 가까이 수용해 복지농어촌건설이 제대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 1 세계로 뛰는 농어업, 활기찬 농어촌

「세계로 뛰는 농어업, 활기찬 농어촌」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10개항으로 대별된 공약을 내놓은 신한국당의 공약은 내용을 가장 구체적으로 구성했으나, 그동안 비판의 대상으로 되어왔던 「신농정」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42조원의 구조개선자금, 15조원의 농특세 자원의 약 50% 내외를 농어업발전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곳에 쓰이므로 이를 재조정해야 하는데 이에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한편, 추곡수매정책과 관련해 쌀값의 계절진폭을 확대한다고만 되어 있지, 학계와 농민들이 그동안 요구해 왔던 바처럼 「15% 이상」을 허용하겠다는 공약이 없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우량농지는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적극 보전한다고 되어 있으나, 우량농지 이외의 조건불리 농가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동안 정부의 정책처럼 식부면적이 축소되어 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해석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축산업 뿐만 아니라 시민,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선통관, 후검사 검역」조치를 「선검사·검역 후 통관」으로 정상화하는 조치, 수입육류의 유통기한 적정화, 냉장육 수입 유통대책 등이 빠져 있다.

생산농민은 생산비 이하로 파는 경우가 많고, 도시 소비자는 비싸게 사먹을 수 밖에 없는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지름길인 도매시장관리 운영방안이 누락됐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

자간의 유통비용 절감을 공약하면서도 가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은 언급조차 없어 유감이다.

그러나 한편, 추곡수매정책의 획기적 개선만인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을 천명한 것은 재정적인 여력까지도 충분히 감안해야 할 집권당으로서 매우 소신있는 결단을 내렸다고 보여져 계속 주시해 볼 일이다. 또한 지방농정조직의 개혁, 농어업인의 참여 확대,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 적용, 품목별 전문 생산자조직 활성화 등의 공약은 기대해 볼만한 일이다.

## 2 농·축·수산업의 부흥

「농·축·수산업의 부흥」을 목표로 25개항의 공약을 한 국민회의는 식량안보, 균형발전, 적정소득보장, 교육, 보건, 문화 등 복지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공약내용을 보면, 신한국당과 민주당의 공약에 비해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선언적 내용이 많고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 또한 42조원과 15조원의 농특세 내용의 문제점, 자율농정 개혁안, 통합의료보제, 품목별 전문조합의 문제점과 합리적 육성방안, 농지제도, 개혁안 등 반드시 필요한 공약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평가된다.

13조에 이르는 농어촌 부채를 경감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농어업인의 표를 의식한 것 같고, 현재의 재정운용 내용과 논리에 비춰 합리성이 없다. 구체적 예시도 없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농·축·수·임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화를 실현하겠다」는 일반론이지 공약으로써는 진부하기까지 한다.

인력육성을 위해 농민수산계열의 각급 학교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도 잘못이다. 기존 학교의 교과내용 및 연구, 교육, 훈련, 응용분야를 현장중심으로 개편, 적극지원해야지 새로이 설립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의례적인 말로 들리기 쉽다. 해양부 설치공약도 정부기구와 축소·재정비가 필요한 현실에 비춰 실현성이 문제가 된다.

한편 계절진폭규제를 없애겠다는 것과 직접 지불제 사항들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 3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농어촌

「희망을 갖고 살수있는 농어촌 건설」을 캐치프레이즈로 한 자민련의 8대 과제는 단순하지만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쌀지급률 1백%달성, 전체 식량지급률 제고, 「선통관, 후검사」제를 「선검사, 후통관」제도로 환원, 수입식품 유통기한의 합리적 조정, 농축수산물의 가공업무를 농수산부로의 일원화, 통합의료보험법 제정,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든 축산농가에 영세율 적용, WTO이행 특별반 내용의 충실한 이행 등 구체적 공약을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농지소유권의 이전을 자유화하면서 농업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진흥지역내의 농지가격과 전국평균 지가 변동률을 염두에 그 차액을 보전하고 차액보전제도를 검토하는 것은 토지투기의 유발 가능성이 높고 재정부담의 현실성이 희박하다.